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5차 전체 회의

- 정부·민간사업자·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종합대책 추진 현황 점검
- 법제도 개선,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적용으로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차단 성과 가시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이하 방미통위)는 14일 서울에서 제5차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24.11.28)」(이하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무효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번호 차단 시스템 도입 경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개선 대책, ▲대량문자 발신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통신 이용 증명원 확인 절차 개선 적용 등을 발표하였고, 방미통위는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수신자에 대한 이통사의 안내 문자 발송, ▲음성 쓰레기 편지(스팸) 대응 방안, ▲법규 제·개정 사항 등을 발표하는 등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무효번호 차단 시스템’의 ‘26년 상반기 적용을 통하여 쓰레기 편지(스팸) 발송자들이 활용하던 무효번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면, 쓰레기 편지(스팸) 신고 건수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효번호 : 미 할당 번호, 이용 중지 등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 등과 협력하여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대응체계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 기반 공동 대응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민간의 전자금융사기(피싱) 탐지 능력 제고와 악용되고 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차단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데이터 공유·개방을 확대하여 민관협업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불법 스팸을 더욱 체계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민관 협의체에 참가한 관계기관과 통신사에서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적용, 국제 문자중계 사의 「해외발 대량문자 차단 지침(가이드라인)」 준수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쓰레기 편지(스팸) 신고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현재 추진 중인 과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방미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전송 자격 인증제를 조속히 시행하여 대량문자 유통시장을 정상화하고,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하위 법규 제·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특히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불법 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는 정부 부처와 민간사업자 간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대응을 위한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2월 출범했으며, 사업자 간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차단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행위 사업자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붙임.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참여기관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이용제도과	책임자 담당자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업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지원과	책임자 담당자

붙임**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참여기관**

구분	참여기관명
관계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전문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통3사	SKT
	KT
	LGU+
제조사	삼성전자
국제전화 사업자	SK텔링크
	한국케이블텔레콤
	드림라인
대량문자 사업자	SKB
	인포뱅크
	다우기술
	젬텍
	슈어엠
	CJ올리브네트웍스
	스탠다드네트웍스
	케이피모바일
유관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특수부가통신매시징사업자협회(SMOA)
플랫폼 사업자	카카오